

보도시점 2025.10.30.(목) 12:00 배포 2025.10.30.(목) 08:30

국가통계연구원,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 발간

국가통계연구원(원장 김 진)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노인 관련 분석으로 「노인 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 「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와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방법」 등*을 수록하였다.

* 이슈분석 외에 통계프리즘에 「위기의 파도, 경제 위기가 서비스업에 미친 영향」, 「직주불일치로 인한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ESG 사회 및 지배구조 지표 분석」, SRI리서치노트에 「ESG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 등 수록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고려대 황명진 교수, 국가통계연구원 우한수 사무관)에서는 국가데이터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적·사적이전소득 비교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국가데이터처 이병식 서기관, 진영원 주무관)에서는 자산을 소득화하는 여러 방법론을 소개하고 각 방법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붙임: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 이슈분석 소개(요약)

담당 부서	국가통계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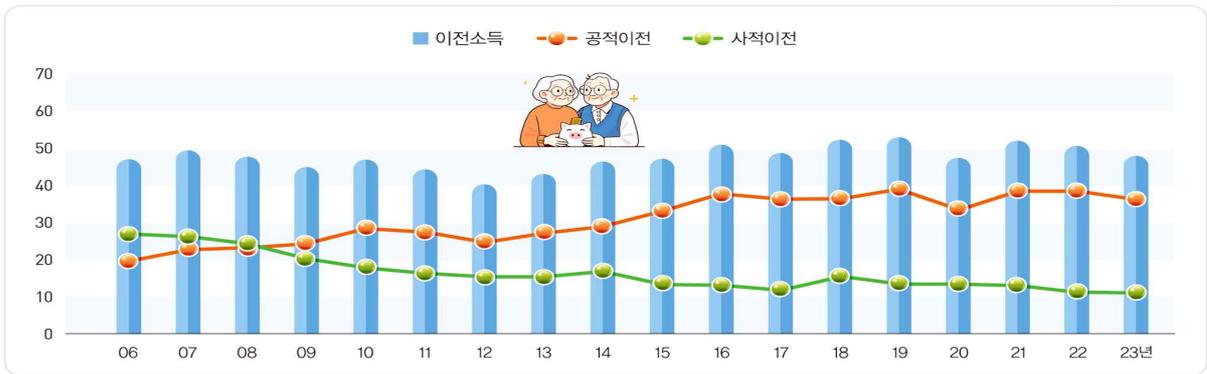
※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통계연구원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견해가 아님

황명진, 고려대학교 교수
우한수,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

-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순으로 비중이 크며, 2006~2023년 기간 동안 이전소득은 경상소득 전체의 약 40~50% 정도를 차지

<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 변화 >

(단위: %)



- 노인 가구의 이전소득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123만원 수준이며,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은 200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감소 또는 정체

< 노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2006, 2014, 2023) >

(단위: 천원, %)

분위	연도	이전 소득	공적이전					사적 이전
			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기타	
전체	2006	703 (100.0)	295 (42.0)	166 (23.6)	0 (0.0)	93 (13.2)	38 (5.4)	408 (58.0)
	2014	721 (100.0)	454 (63.0)	282 (39.1)	76 (10.5)	81 (11.2)	16 (2.2)	266 (36.9)
	2023	1,233 (100.0)	942 (76.4)	528 (42.8)	247 (20.0)	131 (10.6)	36 (2.9)	291 (23.6)

< 노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추이 >

(단위: 천원)



- 노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2010년 대비 2023년 공적이전소득은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이에 반해, 사적이전소득의 증가폭은 미미하였으며, 4분위에서는 감소를 기록

<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

(단위: 천원)

분위	연도	이전 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기타	
전체	2010	674	412	249	65	76	22	262
	2023	1,233	942	528	247	131	36	291
	증감	559	530	279	182	55	14	29
1분위	2010	233	145	25	76	39	7	88
	2023	570	460	93	286	60	19	112
	증감	337	315	68	210	21	12	24
2분위	2010	482	261	39	88	104	30	220
	2023	1,000	746	247	305	143	51	254
	증감	518	485	208	217	39	21	34
3분위	2010	657	295	111	83	78	22	362
	2023	1,295	918	481	284	128	25	377
	증감	638	623	370	201	50	3	15
4분위	2010	842	448	281	51	87	28	394
	2023	1,480	1,170	760	230	143	37	309
	증감	638	722	479	179	56	9	-85
5분위	2010	1,153	910	789	27	72	21	244
	2023	1,811	1,411	1,052	131	179	49	400
	증감	658	501	263	104	107	28	156

- 소득 하위계층(1~2분위)에서는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연금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3~5분위에서는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율 >

(단위: %)

분위	연도	이전 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기타	
전체	2010	100.0	61.1	36.9	9.6	11.3	3.3	38.9
	2023	100.0	76.4	42.8	20.0	10.6	2.9	23.6
1분위	2010	100.0	62.2	10.7	32.6	16.7	3.0	37.8
	2023	100.0	80.7	16.3	50.2	10.5	3.3	19.6
2분위	2010	100.0	54.1	8.1	18.3	21.6	6.2	45.6
	2023	100.0	74.6	24.7	30.5	14.3	5.1	25.4
3분위	2010	100.0	44.9	16.9	12.6	11.9	3.3	55.1
	2023	100.0	70.9	37.1	21.9	9.9	1.9	29.1
4분위	2010	100.0	53.2	33.4	6.1	10.3	3.3	46.8
	2023	100.0	79.1	51.4	15.5	9.7	2.5	20.9
5분위	2010	100.0	78.9	68.4	2.3	6.2	1.8	21.2
	2023	100.0	77.9	58.1	7.2	9.9	2.7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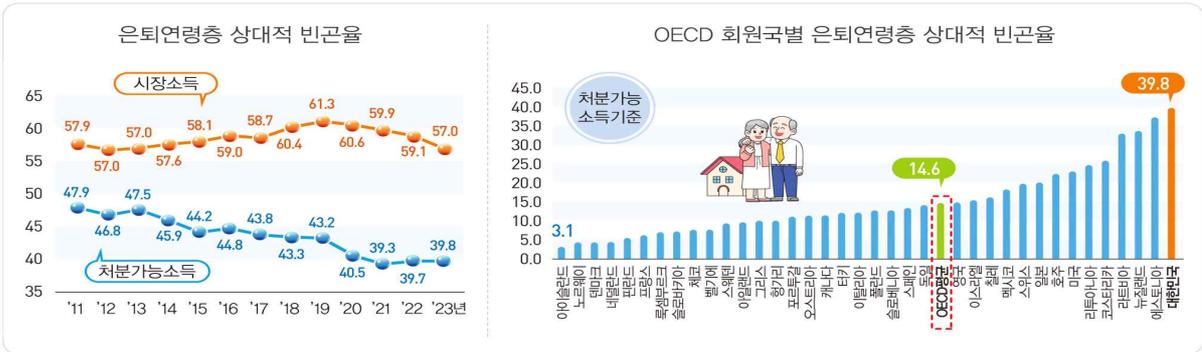
※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통계연구원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견해가 아님

이병식,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 서기관
진영원,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 주무관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47.9%에서 2023년 39.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8.1%p),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

<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과 국제적 비교 >

(단위: %)



- 노인 가구의 소득(2023년)은 전체 평균(7,185만원)의 60%수준인 4,375만원이었으며, 순자산(2024년 3월 기준)은 전체 평균(약 4억 5천만원)보다 많은 약 4억 7천만원 수준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자산·부채 현황 >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	경상소득('23년)	자산('24년)	부채('24년)	순자산액('24년)
전체	7,185	54,022	9,128	44,894
39세 이하	6,664	31,583	9,425	22,158
49~40세	9,083	58,212	13,148	45,064
59~50세	8,891	61,448	10,317	51,131
60세 이상	5,512	58,251	6,328	51,922
65세 이상	4,375	51,517	4,923	46,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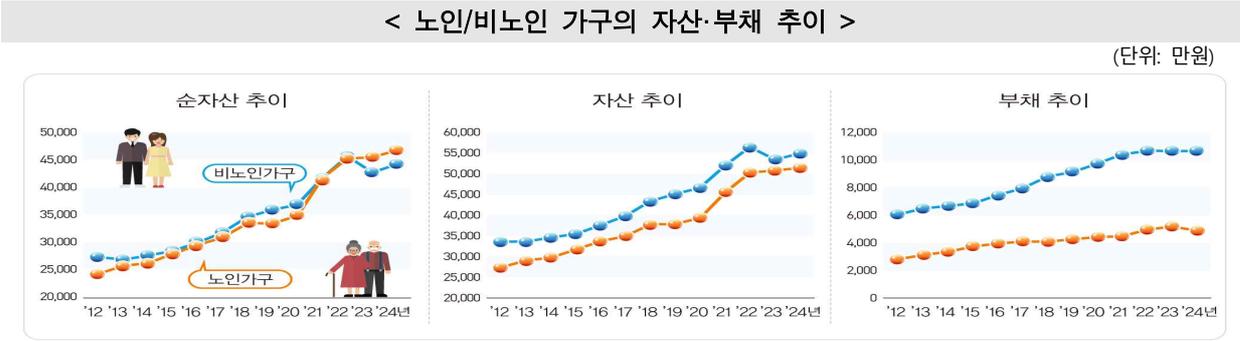
- 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실물자산 보유는 많고 금융자산은 적었으며, 자가거주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줌

< 가구주 연령대별 종류별 자산보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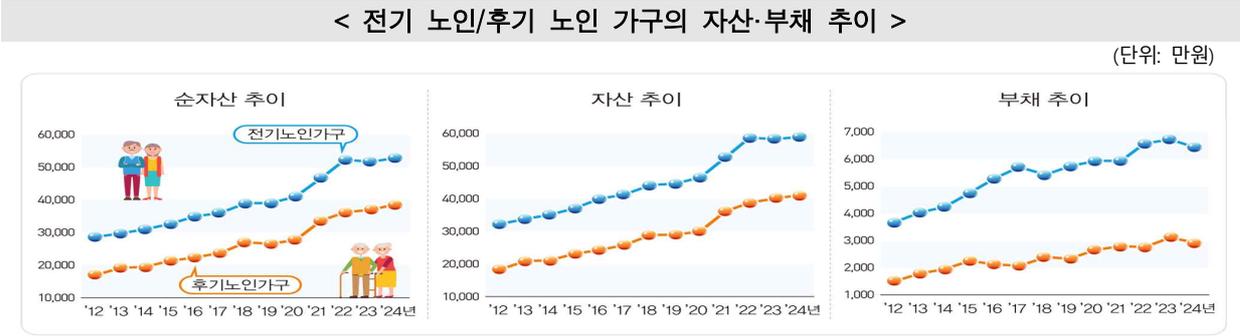
(단위: 만원, %)

가구주 연령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동산			실물자산 / 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자가거주율	
전체	54,022	13,378	40,644	38,084	22,692	58.5	75.2
39세 이하	31,583	13,079	18,504	16,135	11,623	30.1	58.6
49~40세	58,212	15,950	42,262	39,196	25,645	58.0	72.6
59~50세	61,448	15,589	45,859	42,666	25,634	64.1	74.6
60세 이상	58,251	10,976	47,275	45,241	24,761	68.9	81.2
65세 이상	51,517	8,701	42,815	41,278	23,191	69.3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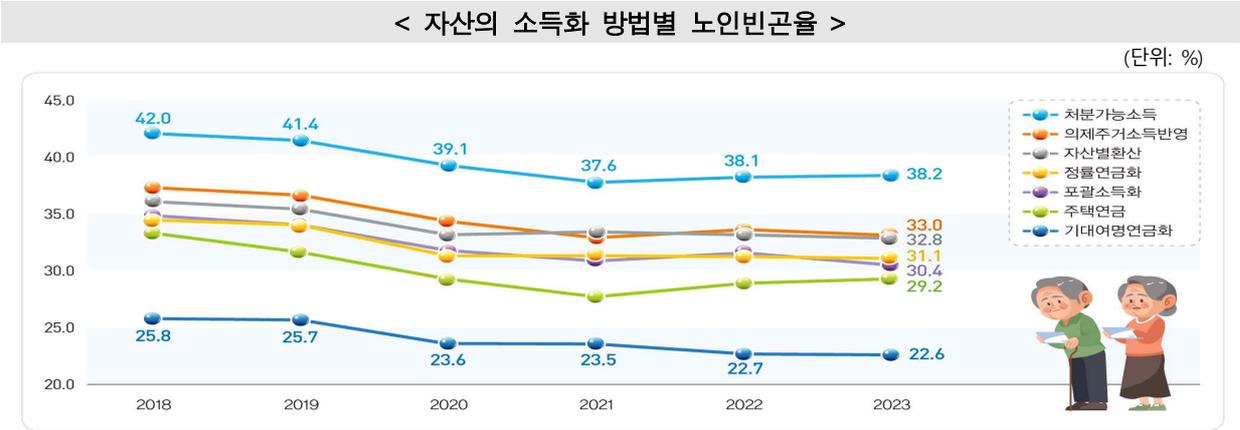
- 노인가구의 2012년 대비 2024년 순자산 증가율은 89.8%로 비노인 가구(61.1%)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또한, 순자산 금액면에서는 2012년에는 비노인 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해 더 많았으나 2023년부터는 노인 가구가 비노인 가구를 추월



- 전기 노인(65~74세) 가구의 2012년 대비 2024년 순자산 증가율(83.0%)에 비해 후기 노인(75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124.9%)이 상당히 높은 모습
- 또한, 순자산 금액면에서는 전기 노인 가구가 2024년에 약 5억 3천만원으로 후기 노인 가구(약 3억 8천만원)에 비해 약 1.4배 수준인데, 2012년에는 약 1.7배 수준이었음



- 자산을 소득화하여 소득과 합산한 결과 노인빈곤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모습
- 여러 방법들 중에서 의제주거소득 반영 빈곤율이 2023년 33.0%로 가장 높았으며, 기대여명 연금화 방식 빈곤율이 22.6%로 가장 낮게 산출
- 방법론마다 각각의 특징·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



※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통계연구원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견해가 아님

조희진, 사회적가치연구원 책임연구원

- 민간의 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슈’에 2020년까지는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년과 2022년에 ‘폭염, 한파’가 7위로 등장하였으며, 2024년에는 4위, 2025년에는 3위로 급상승

<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10대 사회이슈 변화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위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2위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3위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감염병 확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폭염·한파 증가
4위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가능, 높은 근로시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폭염·한파 증가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5위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미세먼지 증가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6위	노후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집값 불안정 (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7위	학벌지상주의	폭염·한파 증가	폭염·한파 증가	가계부채 증가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정부 신뢰 하락)
8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학벌지상주의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가계부채 증가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9위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청년일자리 부족	감염병 확산	청년일자리 부족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지구 온난화
10위	청년일자리 부족	노후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	지구 온난화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주: 노란색은 경제 영역, 파란 색은 사회 영역, 초록색은 환경 영역에 해당

- 자연재해 등의 ‘환경’ 문제와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인해 유발되는 ‘사람’ 문제는 사회문제 발생 원인으로,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즈니스 리스크 심화와 이해관계자 가치 저하를 야기

< 사회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사회문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원인	1차 결과	2차 결과	
부정적 외부효과 (환경 문제)	탄소 배출량 증가, 자원고갈 등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연재해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비즈니스 리스크 심화
불평등한 사회구조 (사람 문제)	소득 불평등, 빈곤, 주거 불평등, 고용 불평등 등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고립, 자살률 증가 등	이해관계자 가치 저하